새로운 국제경제질서에 적응할 때

이 철 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

UR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그동안 국제무역의 교통정리를 담당하던 GATT체제는 새로운 국제무역기구로 전환하게 되었다. GATT회원국으로 UR협상에 참여했고, 합의사항을 수용하여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국가를 회원국으로 하는 이른바 「세계무역기구(WTO : World Trade Organization」가 1995년 GATT를 대신하여 출범하게 된다. 이는 앞으로의 국가간교역이 새로운 무역질서 아래서 상호간 문호개방에 따른 각종 이득이 주어지는 WTO체제로 전환됨을 의미한다.

최근 일부에서는 재협상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으나 다른 한편에서는 재협상이 큰 의미가 없다는 주장이 맞서 대립되어 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역을 통한 경제발전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 사정에 비추어, 농산물협상을 거부함으로써 WTO체제 밖에 머물러야 할 또 다른 이유를 찾아내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WTO체제를 이용하여 국가이익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찾는 데 노력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조립생산이냐 완제품수입이냐 하는 문제에 집착하여 아까운 시간을 허비하는 것보다는 보다 더 효율적인 산업구조를 갖출 수 있도록 온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

물론 완제품을 수입하는 것보다는 국내 조립품을 애용하는 것이 국가경제에 유익한 것이므로 바람직한 일이 될 것이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항상 값싸고 좋은 물건을 찾기 마련이며, 질이 나쁘더라도 국산품을 애용하자는 저소득 시절에 써먹던 애국심의 강요는 그 효과를 보장할 수 없는 것이다. 특히 개방된 시장에서의 성패는 가격과 품질에 달려 있다. 그리고 가격과 품질은 생산성에 의해 결정된다. 양돈의 경우 한국을 100으로 할 때 일본 134, 대만 125, 덴마크 134, 미국 133 등으로 나타나 우리나라보다 30% 이상 높은 것으로 계산되며 미국 외의 나라는 모두 사료원료를 수입하는 국가다. 거꾸로 보자면 이는 우리의 생산성 향상의 가능성과 방향을 보여 주고 있다는 사실이다.

생산성만 높다면 전세계적인 무역자유화 추세는 크게 걱정할 일이 아니다. 세계 제일의 실력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국내에서 치러지는 타이틀전에서는 KO로 나가떨어지지만 않는다면 국내심판들의 우호적인 판정으로 승리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 사실이다. 물론 남의 나라로 나가서 시합을 치르는 경우에는 이와 같은 우호적인 심판들을 만나기가 쉽지는 않기 때문에 가능하면 KO승으로 시합을 끝내는 것이 바람직하나 판정으로 갈 경우 실력차이는 어떻든간에 결과는 예

상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만다. 이렇게 볼 때, 외국에 나가서 경쟁을 해야 할 수출산업의 경우 공정한 심판을 바라는 의미에서 세계무역의 자유화는 우리가 바라는 방향일 수도 있다. GATT, WTO는 이와 같은 시합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칙을 정하고, 심판의 편파적인 판정을 조금이라도 예방하여 불확실성을 줄이고 공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감독하는 기구로 비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약간씩의 돈육수출을 하기도 했다. 종전에는 수급조절차원에서 억지수출이었다면 최근 몇 년 동안은 수출본격화를 위한 시장개척의 의미가 있었다. 수입국인 일본의 위생수준에 적합한 수출전용 도축장도 마련하고 규격돈을 사육하는 등의 기반을 조금씩이나마 만들어 온 것이다. 그동안 아무런 생각없이 공급되던 축산물의 위생수준이 어떻고 잔류유해물질이 있냐 없냐 하는 문제는 수출시장에서 처음으로 거론되어 국내 일반소비자 사이에 일반화된 식품으로서의 준수사항이다. 그런 의미에서 수입자유화는 우리 축산업계의 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 그래도 적은 비용으로 값싼 수입품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고, 수입상품을 통해 어떤 상품이 수출될 수 있고, 우리 상품의 약점이 무엇인가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수출을 하든 수입축산물에 대항을 하든지간에 우리의 경쟁력은 계속 향상되어야 살아남을 수 있다.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일로 관련산업에 대한 관세, 부가가치세 등의 조정, 도축장 등의 유통관련시설의 현대화, 생산성 향상을 위한 규모화·단지화 그리고 축산폐수처리시설의 공동화 등이 매번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기능을 자율화하는 것이다. 양돈산업으로 볼 때, 사료, 기자재 등을 수입 또는 제조하는 투입요소산업에서부터 소비자가 고기를 선택하고 돈을 지불하는 소매점의 포장단계에 이르기 까지의 모든 기능을 자율화할 때가 된 것이다. 여기서 정부가 해야 할 일, 민간이 해야 할 일 등을 확실하게 구별하여, 누구나 하고 싶으면 시작할 수 있도록 자유화하는 대신에 그들이 져야 하는 최소한의 의무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책임을 확실하게 규명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일 것이다. 민간에서 하기 어려운 사업으로 공익기능이 중요시되는 사업은 사회간접자본 형성의 일환으로 적극 수행해야 할 것이니 이러한 사업이 너무 많아서도 곤란하다.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응급처방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루어지는 포석이 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경우가 많다. 도축장을 예로 들면, 도축장의 통폐합과 시설개선방안보다는 도축장의 시설기준을 수출대상국의 요구수준에 맞게 설정하여 이에 맞는 도축장은 숫자에 관계없이 신설을 허가하는 방안이 체질강화를 통한 경쟁력 향상효과가 더 클 것이다. 이러한 발상을 무모하다고 볼 수도 있으나 기득권을 보호하는 경쟁제한 상황보다는 자유로운 경쟁을 조장함으로써 결국은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이다. 국내경쟁에서도 살아남지 못한 상품을 국제시장에 내세우려는 무모한 투자는 결국 자원의 낭비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세계는 이미 무한경쟁시대에 서 있다. 몇몇 사람의 기득권 보호를 위해 국민을 희생시킬 수 없다. 경쟁을 제한하는 모든 장치는 제거되어야 한다. 그리고 모든 규칙과 의무는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산업에 관련된 모든 법률과 규칙으로 만들어진 제도는 하나하나 새로운 관점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축산분야는 더 많은 노력을 집중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